

공정성 의혹 해소... 비문주자들 과잉대응 부담

■ 민주당 경선 정상화 배경 및 전망

문 '대세론'에 탄력... 손김정 반전 노력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하루 만에 정상화한 것은 비문(비문재인) 후보들이 제기한 모바일투표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된 때

문이다. 하지만, 이번 경선 과정에서 보듯 비문(비문재인) 후보들의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약한 상황이어서 또 다른 불공정 논란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게 정권의 전망이다.

당 선거위는 27일 "모바일투표 중간 실패 선거인단(인증 후 투표 실패가 된 경우) 수가 경선을 중단할 만한 중차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경선 정상화를 선언했다. 전날 경선 참여를 거부했던 3명의 후보도 모두 이날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

◇투표 직후 전화 끊어도 인정하기로 = 이번 정상화 선언에 따라 선거위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부터 이날

오전 잠정 중단했던 강원지역 모바일투표를 재개했다. 특히 투표시 기존 방식대로 기호 순으로 안내하되 중간에 투표하고 전화를 끊어도 투표를 인정하기로 해 그동안 불공정 논란을 아예 차단했다. 일부에서 후보를 순회 호명하는 방법을 거론했으나 기호 순과 헷갈릴 수가 있다며 모든 후보들이 반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28일 예고된 연설회와 순회투표도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공정성 훼손 주장 더 하기 힘들어 = 민주당 경선이 정상화된 것은 로그파일 검토 결과, 기존 모바일투표 방식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비문 후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선거위는 로그파일 조사를 통해 투표에 실패한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599명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주 모바일투표 신청자(3만2984명)의 1.8% 규모다.

따라서 비문 후보들이 과잉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도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것은 명확하다. 또 비문 후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산 모바일투표 결과 발표를 강행하는 등 경선 과정에서 일방적 통행으로 신뢰도 상

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향후 경선 구도는? = 불공정 시비가 일단락되면서 문 후보는 대세론에 탄력을 받게 됐다. 따라서 남은 강원과 충북은 물론 경남과 호남에서까지 승리, 아예 승세를 굳히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손학규·김두관 후보는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손 후보는 충북(8월30일)과 전북(9월1일), 김 후보는 경남(9월4일) 경선에서 추격의 실마리를 잡고 다음달 6일 열리는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 역전을 한다는 각오다.

특히 선거인단 규모가 큰 충북(3만1000여명)과 전북(9만5000여명) 등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는다면 14만여명의 선거인단이 있는 광주·전남 경선에서 대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날 김 후보가 "지금 민주당에는 노무현이라는 이름만 있고 '노무현 정신'은 사라져가고 있다"며 친노(친노무현)세력과 결별을 선언, 향후 경선 구도는 '친노 대 비노(비노무현)' 대결 양상을 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檢, 민주 공천헌금 수사 '과장'

수십억원 투자금 수수 혐의 관련

친노매체 대표 등 4명 영장 청구

검찰이 지난 4·11 총선 과정에 서 민주당합당 공천 약속과 함께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친노 성향 인터넷 방송국 전 대표와 서울 시내 구청 산하단체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인터넷 방송국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1)씨와 서울 강서구청 산하단체장 이모씨, 세무법인 대표인 또 다른 이모씨, 사업가 정모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라디오21의 본부장 겸 이사로 방송책임자를 맡고 있는 양씨는 두 이씨와 정씨로부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민주당 공천을 약속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단체인 이씨는 대형교회 장로로 2007년 12월19일 대선 때 병행 실시된 기초단체장 재선거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왔던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양씨 등을 체

포했으며 이들의 서울·부산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중수부는 단체인 이씨 등이 '양씨에게 수십억원을 줬는데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별도로 투자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발설하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는 민주당 당 대표 보좌관 출신인 양씨가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받은 돈이 민주당 쪽에 실제로 건너간 정황이 있는지 사용처를 확인 중이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방송국 성우·PD 출신인 양씨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2003년 2월 개국한 라디오21의 대표를 지냈으며, 2010년 민주당 '국민의 명령' 집행위원회 맡은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이 양경숙 라디오21 본부장과 민주당의 공천거래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유선호 전 의원 등 선관위원들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후보 측 내부 회의를 거쳐 경선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개숙인 민주 지도부, 미묘한 온도차

경선 파동 관련 친노-비노 구도 드러내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대선 후보 경선 파동과 관련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모바일 경선 파동과 관련해서는 미묘한 인식 차이를 보이며 당내의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의 구도를 드러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이 좀 더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불공정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유를 막론하고 대단히 송구스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

다"고 했다. 대선 경선준비기확단장이었던 추미애 최고위원도 "합리적이라고 보고 도입한 것으로, 후보들도 오해를 풀고 깨끗하게 참여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반면, 비노 진영 일각에선 이를 계기로 지도부의 공정성 시비를 털고 가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문제는 비문주자들의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라며 "불신을 명백히 견어내야 경선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파행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이 정권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담대회 과정에서 '이-박(이해찬-박지원)

담합설'을 제기했던 김한길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많이 죄송하다"며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경선의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진의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도부의 조기 진화 시도에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지도부와 선관위 책임론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 경선이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경선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번 사태로 사실상 흥행은 물론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로 민주당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 장외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만 더 뜰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선거인단 13만9000명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후보 선출에 참여할 광주·전남 선거인단은 13만9000여명으로 집계됐다.

27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모바일투표, 투표소투표, 순회투표에 참여할 광주·전남 선거

인단은 13만9천274명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모바일투표 5만8469명, 투표소투표 1만5258명, 순회투표 610명 등 총 7만4337명이다. 전남은 모바일투표 4만4849명, 투표소투표 1만9316명, 순회투표 772명 등 총 6만4937명이다.

광주·전남 모바일투표는 다음 달 4~5일, 투표소투표는 다음 달 5일, 순회투표는 다음 달 6일 이뤄진다. 전체 개표 결과는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가 있는 순회투표 직후 이뤄진다.

광주·전남 선거인단 규모는 지금까지 확정된 제주와 울산, 강원, 충북, 인천, 전북, 경남 등과 비교해 가장 크다. 따라서 광주·전남 선거인단의 표심이 대선 경선 관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에서 문제인 후보가 큰 차이로 1위를 하면 대세론에 탄력을 받고 손학규·김두관·정세균 후보가 '선전'을 하면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극적인 반전을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텃밭인 광주·전남 표심이 다른 지역보다 의미가 크다고 보고 표심 공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그건 무슨 태풍이니?!

www.kofc.or.kr

따뜻한 정책
돈돈한 금융

활짝커라 중소기업

한국정책금융공사 '광주지사' 출범!

2012년 8월 28일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주/지/사/안/내

관할구역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주요업무	중소·중견기업 지원 녹색·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사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
업무개시	2012. 8. 28 (화)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삼우중앙로 80 (치평동) 전문건설회관 4층
금융지원상담	062) 716-1160